

16 칼럼

저출산의 경제학

민인식
교수 · 경제학

I. 들어가며

우리 학생들에게는 대학 생활의 복잡함 속에서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학점, 인턴십, 취업과 같은 즉각적인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고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통계적 추세가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형성하고 있으며 결국 취업시장부터 사회보장, 의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칼럼을 시작하고자 한다.

2024년 3월 공개된 대한민국 작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선진국 모임인 OECD의 2021년 기준으로 1명 미만 출산율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출생아 수 역시 23만 명으로 2015년 43만 명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과 빠르게 늘어가는 사회는 다면적으로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한다.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젊은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의료서비스 및 연금시스템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다양한 저출산 극복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인구구조 추세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본 칼럼에서는 경제학적 시각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바라보고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저출산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가?

세계적인 학술지인 Science에 실린 Lee et al. (2014) 논문에서는 “저출산이 과연 문제인지?” 40여 개 국가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통계자료를 통해 그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첫째, 대체수준(2.1명) 근처의 출산율이 가구와 정부에게 가장 유리한 수준이다. 그러나 시장에 진입하는 노동력에 대한 자본 투입(capital cost)을 고려할 때,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이 1인당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다. 둘째,



대한민국 작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선진국 모임인 OECD의 2021년 기준으로 1명 미만 출산율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사진=픽사베이)

“

정부에서 다양한 저출산
극복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인구구조 추세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

2005~2010년 사이에 세계 인구의 48%는 대체수준 이하 출산율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해당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정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 공공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셋째, 해당 연구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시각에 도전하면서 복잡한 경제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했다.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규 노동력에 대한 자본투입을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자본비용을 고려할 때, 최적 출산율은 대체가능 출산율보다 낮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해당 연구의 추정에 따르면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5(high capital-cost 시나리오)~1.55명(low capital-cost 시나리오)으로 예측한다. 자본집약적인 성장경로를 선호하는 경제에서는 자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출산율이 최적일 수 있다.

III. AI와 노동생산성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을 지속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Wei and Xie(2023)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서 AI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을 ‘출산’

으로 모델링한다. 가구 내 근로자는 시장생산과 가정생산 사이의 시간을 배분할 때 ‘출산’을 선택하면 임금손실로 이어지는 시간비용과 1인당 자본 측면에서 자본희석비용(capital dilution cost)이 발생하게 된다. AI의 확산은 가계의 소득구조를 자본소득으로 기울게 하고 따라서 시간비용을 줄이고 자본희석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아이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가지고 있거나 인구규모가 R&D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는 경우, AI 기술심화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I의 발전과 자동화가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존 접근방식과 달리 기술적 해결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AI 기술의 발전이 가구 내 생산과 시장 생산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특히 ‘아이 생산’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V. 싱글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 중 징벌적 대안이 ‘싱글세(single tax)’ 또는 ‘무자녀세(childless tax)’이다. 해당 정책은 미혼이거나 무자

녀인 가구에 조세를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대신 자녀가 있는 가구에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는 독신/무자녀 가구에 간접적인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2년 한국경제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유자녀 가구가 받는 세제 혜택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유자녀 가구와 독신가구 조세 격차는 OECD 평균인 10.2%p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5.0%p이고, 이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혜택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증여세 비과세 특례,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소득공제상 자녀 범위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독신/무자녀 가구에 부과하는 싱글세 정책에서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자녀를 갖고자 하나 갖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세부담 가구에 대한 경제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이 결혼과 자녀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싱글세라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가 오히려 사회적·경제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세제 혜택의 설계와 시행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